

“사필귀정... ‘내란 범죄’ 상응하는 법 심판 받아야”

광주·전남지역 각계 반응

강기정·김영록 “민주주의 지켜야” 지역 정치권 “국민이 만든 승리” 노동·경제계 “동조 세력도 처벌” “법치 근간 흔드는 행위 멈춰야”

12·3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정치·경제·노동 등 각계각층에서는 죄에 상응하는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가수장으로 서 법치 근간 흔드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 앞에 ‘더 평등’ 했던 대통령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응원봉 시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노선을 지켜냈다. 탄핵과 내란 가담자 처벌, 그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자”고 밝혔다.

김지사도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체포 ‘사필귀정’이 딱 맞는 말”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이제 국민 배반 행위의 최종결과는 현재 파면과 구속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는 성역 없는 수사와 법치·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



광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15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구속수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를 내고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 집행을 불법 거부한 내란 수괴는 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 탄핵 인용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란에 동조 또는 비호한 극우세력의 단죄에도 당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이은, 제2의 국민 승리다. 국민이 민주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며 “이제 구속기소와 현재 파면 결정 만이 내란 사태로 추락한 국격과 휘청인 경제·외

교를 정상화할 수 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당 전남도당도 “윤석열은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유린해 국헌을 문란하고 모든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여전히 자신의 범죄 행위를 궤변으로 일관하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 옹호 관련자도 모두 색출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얼음장 같은 도로 위에 은박지 하나 덮어쓰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광장을 환하게 밝힌 국민의

굳건한 의지의 결과”라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이제는 윤석열이 속대발로 만들어 놓은 헌정질서와 민생경제를 재건하는 데 전심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경제계도 잇따라 환영의 성명을 냈다.

민주노동 광주분부는 “윤석열 처벌과 파면,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해체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법원 결정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은 “계엄사태부터 대통령 체포까지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면서 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다. 수출입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연쇄적으로 소기업들의 경영도 흔들리고 있다”며 “수장의 공백으로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기관들이 R&D(연구개발) 등 예산 집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것인데, 경제 재건을 위해 하루빨리 불확실한 상황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는 국격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거부하는 사법부·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며 “윤 국민이 윤 대통령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사법부를 희롱하는 처사를 하루빨리 그만둬야 한다. 검경과 공수처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내란의 공모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정성현·박소영 기자

문재인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

문재인(사진) 전 대통령은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옥 기자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더

이어 “다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둘로 나뉘어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옥 기자

조국 옥중 서신 “3년은 길다’ 약속 지켰다”

22대 총선 구호... “국민이 이길 것”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3년은 너무 길다”는 22대 총선에서 내세운 구호를 지켰다며 환영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5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가 윤석열이 체포되면 공개해달라고 편지와 메모를 남겼다”며 조 전 대표의 서신을 공개했다.



다”며 “이제라도 서신을 공개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숙제 하나를 끝낸 기분”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

며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전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내세운 구호다. 조 전 대표는 “이제 민주 정부 수립과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9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서신을 통해 “서울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했는데 무산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옥 기자

백악관 “한국민 확고 지지... 법치주의 공동 약속 재확인”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백악관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에 관한 뉴시스 서면

질의에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라며 “헌법

에 맞게 행동하려 한 한국과 그 시민의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력 의지도 밝혔다.

대변인은 “최 대행 및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여전히 전념한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계엄 6회차 박지원, ‘법 무너졌다’는 尹 향해 “샷업”

‘윤 입장문’에 비판글 게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령 43일 만인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소수사본부에 체포된 가운데, 박지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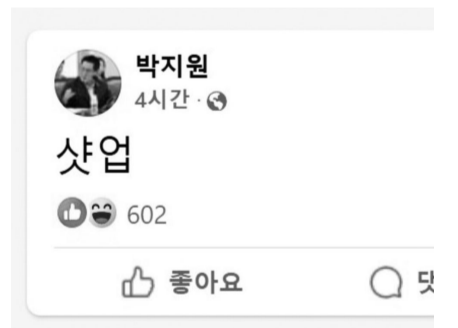
15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샷업(Shut up·입 다물라)”이라고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날 오전 10시56분에 올라온 것으로, 윤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된 직후 영상으로 된 입장문을 내놓은 뒤에 올라왔다.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찰에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며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미스러운 유행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체포 이후에도 박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체포됐는데 내란 특검의 필요성이 있나”라면서 “(윤 대통령이) 특검받겠다며 공조본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검은 구성 등 한참 후이니 잘못하면 석방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해석으로 가능한 셴법이지만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촉구하는 것은 과거에도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야당 등 정치권이 촉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공조본은 만약 특검이 구성, 활동하게 되면 모든 수사 자료를 특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SNS에 공유하며 “윤 대통령 체포 구속이 민생경제”라고 밝혔다. 이어 “후배 의원 등 5명이 여의도 일식당에 갔다”면서 “사장은 ‘못 견디겠다, 빨리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흥이나야 신바람 나고 그 저력이 국난을 극복한다”며 “내일 체포하도록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당장 단행해 체포 장애 요건을 제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내려진 계엄령을 모두 겪은 인물로, 12·3 비상계엄 당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 바 있다. 이후 본회의장 의자에 앉지 않아 지쳐 잠든 모습이 포착되며 큰 화제가 됐다.

오지현 기자